

남녀고용 차별 정부가 앞장

동사무소 서기 등의 일을 보는 9급 행정직 공무원의 남녀채용비율을 8대2로 공고하는 등 정부의 여성정책 부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임완호 기자)

91.3.30

6공 여성정책관련 공약 실종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 ‘여성 취업기회 확대’를 주요 여성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6공화국 정부의 대여성정책 추진의지가 크게 의심받고 있다.

지난 5일 관훈토론회에서 노재봉 국무총리가 “여성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대책”에 대한 질문에 “요리를 잘하는 것이 여성들의 주요역할” “여성의 일은 자원봉사가 알맞다”는 등의 대여성관을 피력해 많은 여성들을 아연케 했다. 또한 3월중 실시될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모집공고에서 서울시·경상남도 등 전국 10개 시도가 남녀 비율을 8:2로 책정, ‘모집·채용에서 남녀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정부차원에서 정면 위배해 여성계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나영희 사무국장은 “국무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무시한 발언을 한 것, 9급 행정직 공무원 남녀 차등모집은 정부의 여성정책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성인력 활용방안, 여성직업훈련원 개설 등 6공 출범후 여성정책을 내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6공의 여성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관훈토론회에 질의자로 나왔던 〈서울신문〉 송정숙 논설위원도 “총리의 발언이 정부의 여성정책이라기보다는 평소의 여성관이라고 느껴지지만 질문자로서 다소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9급 행정직 공무원 모집에서 남녀비율을 차등 적용한 각 시도의 처사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조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5일 경남여성회 등 16개 단체들은 ‘9급 행정직 공무원 여성차별채용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 해당 시도의 시장·도지사 고발 검토 등의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무원모집때 비율 차등책정 큰 반발 총리 봉건적 여성관 피력에 어리둥절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월2일 관보에 발표한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공고에서 남 4백49·여 1백8명을 뽑는다고 발표했고, 서울수도 3월의 1차시험에서 남 8백59·여 1백41명을 뽑기로 했다.

여성을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적게 뽑는 공고는 부산·대구·충

남·전남·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대부분의 시도가 성별 구분모집 조항이 삭제된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남녀차등을 두지 않고 뽑은 결과, 시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여성이 50% 이상 합격했다.

여성합격률이 예상외로 높자 각 시도는 91년도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공고를 내면서 “필요에 따라 성별 분리모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42조를 내세워 차등모집을 합리화하고 있다.

대체위원회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무원 성별 차등모집은 능력에 대한 평가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명백한 성차별정책이자 반인권 행위이며, 남녀평등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물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남녀차별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외국어대 이은영 교수(법학과)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처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성별모집조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제2장관실 황인자 과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과 상치돼 현재 내무부·노동부와 함께 이 문제를 검토중이지만 빠른 시일 안의 시정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계는 “지난해 신입사원 모집공고에서 남성만을 명시해 민간기업인 신도리코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공무원 모집에서 남녀 수에 차이를 둔 것은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실천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과 올초에 보사부와 교육부가 여약사·여교사 과잉배출을 막기 위해 약대와 교육대의 남녀비율을 1대1, 3대7로 하자고 정책건의한 것 등도 “정부의 남녀고용평등법 정착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여성계는 반발하고 있다.

(신연숙 기자)

